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역할

산업구조 脫제조업화 가속

건설분야 성장이 고용 열쇠

세제·금융지원 선별적 정비

중소업체 투자활성화 필요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 전쟁 중이다.

선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도 올해 국정목표의 핵심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

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모든 국가의 고민이 됨에 따라 우리의 정책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고용 확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각국의 고민에는 근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탈(脫)제조업화’ 및 ‘정보화’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소수정예화를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고용이 안정적인 제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고용이 가변적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는 지구 어디서라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일할 수 있고, 굳이 특정한 위치로 가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용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상황 아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수출·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내수·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7.2%인 약 170만명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내수중심 산업이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제조업의 1.5배에 달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가 증가하면 타 산업의 고용도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SOC 투자가 10조원 증가하면 고용이 15만9000명 증가하는데, 이 중 54.1%가 건설업에서, 45.9%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건설산업은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국내에서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악화된 우리의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제 일할 의욕이 있는 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

정부 재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처럼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의 정비와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의 선별적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의 진입 기피, 현장 숙련인력의 고령화 등의 악순환을 끊고 국내 고용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정 노무비 확보와 현장근로자 복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높일 것인지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녹색건설산업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미래 건설산업의 질적 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건설 벤처기업 및 창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단편적 대책과 정부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다.

문제와 대안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하에 각 경제주체가 실천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2010.02.17